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송바우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개정이유

- 행정 환경 변화와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도시정보센터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보센터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

3. 검토 및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임.
- 안 제3조의 개정 내용은, 상임위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었던 도시정보센터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상

임위원회를 변경하여 분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도시정보센터를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소로 편제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소관 변경

부서명	현 행	변 경	비고
도시정보센터	도시환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송바우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 함.

2. 주요내용

- ‘금품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등’의 정의에 따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금품등’의 범위에 포함
-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안 제23조)
 -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안 제4조)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10개 항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 의원 임기 개시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6조) :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4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 회피
- 가족 채용 제한(안 제7조) : 의원이 안산시(소속 행정기관 포함)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8조) :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안산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23조) :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규율대상 : 의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안 제13조)

-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정(안 제18조)

-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배우자 외에 직계 존속·비속을 금지 대상에 포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 허용 금품등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

○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20조)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의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 근거 마련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 개정(안 제27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반영
- 금지된 금품등의 반환비용 청구 등의 근거 및 필요 서식 마련

○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28조부터 안 제39조)

-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방법, 위원회의 회의, 의결사항의 통지 방법 등 운영방법 구체화

○ 행동강령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안 제40조)

- 의원의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3. 검토 및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의거 의장은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 제23조는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10개 항목으로 구체화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의 의원 임기 개시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한 특혜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 4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하였고, 조례(안) 제23조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신고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 제13조는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금전출연, 인사징계, 업무상 비밀, 계약행위, 거래행위, 평가 판정, 수상 포상, 감사 조사 분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개정 조례(안) 제20조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제한은 직무관련 또는 지위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였고, 사례금의 상한액과 횟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개정 조례(안)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운영 자문기구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구성방법, 회의, 의결사항 통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정 조례(안) 제40조는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을 규정함.
- 별표에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고, 별지 서식에는 본 조례 시행시 필요한 각종 신고 서식을 정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 구성 및 행위기준

○ 구성 : 총 6장 41개 조문, 21개 행위기준

- 제1장 총칙 : 제정 목적, 직무관련자, 금품등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 제2장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8개)
- 제3장 행위기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7개)
- 제4장 행위기준 :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6개)
- 제5장, 제6장 이행체계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 21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8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7개)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적 이해관계 신고(제4조)</u> ▪ <u>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u> ▪ <u>직무관련 조안자문 등의 제한(제6조)</u> ▪ <u>가족 채용 제한(제7조)</u> ▪ <u>수익계약 체결 제한(제8조)</u> ▪ <u>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9조)</u> ▪ <u>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0조)</u> ▪ <u>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11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2조)</u> ▪ <u>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3조)</u> ▪ <u>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4조)</u> ▪ <u>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제15조)</u> ▪ <u>사적노무 요구 금지(제16조)</u> ▪ <u>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7조)</u> ▪ <u>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8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9조)</u> ▪ <u>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0조)</u> ▪ <u>영리행위의 신고(제22조)</u> ▪ <u>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제23조)</u> ▪ <u>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4조)</u> ▪ <u>성희롱 금지(제25조)</u>